

이슈브리프



1. 이슈와 쟁점

- 베이비박스과 영아유기
이미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에 즈음하여
박복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동양육비 지원체계 국제비교 -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정재훈 |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2. 이슈 소개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의 의미와 주요 내용
차인순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베이비박스과 영아유기

이 미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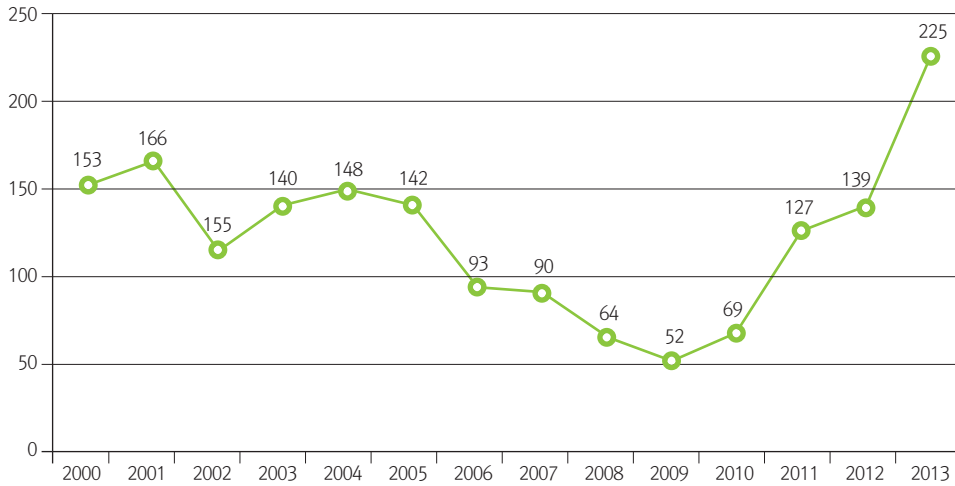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에 대한 언론보도가 확산되면서 영아유기와 베이비박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2012년 8월부터 입양특례법 개정안 시행 이후 입양 전 출생등록이 요구됨에 따라 이에 부담을 가진 미혼모가 자녀를 유기하여 영아유기가 증가한다는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베이비박스에 남겨진 쪽지에 출생등록의 부담으로 아기를 유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연이 소개되면서 입양특례법 재개정 요구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2000년 초반 이후 세계적으로 초저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사회는 출산장려에 상당한 정책적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다. “낳기만 하세요, 키워드리겠습니다”라는 정책적 구호가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영아유기 현상을 통해 인식하게 된다. 자녀를 유기하는 부모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에 심히 불편할 것이다.

영아유기는 오래 전부터 우리사회에 존재해 왔다. 영아유기와 관련된 2000년 이후 경찰청 통계를 살펴보자(〈그림 1〉 참조). 입양특례법이 시행되었던 2012년 139건, 2013년 225건으로 2013년 년도에 2000년 이후 최고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영아유기가 급속히 증가한 것이 사실이지만, 영아유기 수준은 2000년-2005년 기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00년 153건, 2001년 166건, 2005년 142건이었다. 2006년-2010년 감소하다가 2011년 증가하여 127건에 달하게 된다.

경찰청 자료가 보여주는 것처럼 영아유기는 입양특례법 이전부터 우리사회의 문제였다. 미국에서도 영아유기는 큰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병원응급실 등 주정부가 지정한 곳에 영아를 인도한 부모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세이프 헤이븐

(단위 : 건)



자료: 경찰청

[그림 1] 연도별 영아유기 발생건수

(Safe Haven)”법이 1999년 텍사스주에 처음 도입된 이후 2008년에는 50개주에서 확대 실시되고 있다 (이미정, 2013).

유럽에서도 베이비박스는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2013년 27개 EU 국가 중 11개국에서 베이비박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유엔아동인권위원회의 입장은 단호하다(이미정, 2013). 베이비박스가 아동이 친생부모를 알 권리와 자녀양육 관련 국가 지원을 받을 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원래의 취지와 달리 영아유기를 부추킨다고 보고 철거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서울시 관악구에 2009년 베이비박스가 처음 설치되었다.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영아 3분의 1은 부모가 되찾아 갔다고 한다(이민지, 2013).¹⁾ 자녀를 양육하기에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베이비박스에 아동을 유기한다. 미혼임신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고 아이 아버지와는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혼자 고민하다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없어서 아이를 놓고 가는 미혼모에서 장애아동을 둔 빈곤한 가정의 부모에 이르기까지 자녀 양육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다.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이 관할 구청에 신고되면 어린이병원에서 건강점검을 받고 이후 아동보육시설에 배치된다. 베이비박스의 등장으로 아동유기예수도권 집중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 접수된 유기아동은 지난 5년간 8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전국 유기아동이 베이비박스가 설치된 관악구에 몰리기 때문이다(김유나, 2014).

서울시에 따르면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은 2010년 4명, 2011년 25명, 2012년 67명에서 2013년

1) 최근에는 경기도 군포와 부산시 사상구에도 종교단체에 의해 베이비박스가 설치되었다.

208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유아람, 2014). 베이비 박스 논란이 언론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홍보되면서 합법적 아동보호시설로 오해하며 유기아동이 늘어난다는 지적되고 있다(유아람, 2014).

2013년도 초반 입양특례법으로 촉발된 영아유기 논란은 전국의 언론매체를 통해 베이비박스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언론보도를 통해 “관악구 신림동 베이비박스에 가면, 아이를 익명으로 유기할 수 있고, 그러면 그곳에서 아이들을 따뜻하게 돌봐준다. 익명으로 아동을 유기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아동의 생명이 안전을 보장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고 TRACK의 대표 제인 정(Jane Jeong)은 주장한다.

베이비박스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딱한 사정으로 영아를 유기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베이비박스가 길거리에 버려질 영아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베이비 박스가 영아유기의 환경을 조성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전문가들은 부모가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버릴 수 있게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베이비 박스의 아기는 입양이 되어도 부모에 대해 알 수 있는 길이 없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베이비박스가 영아유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영아유기와 베이비박스 현상은 빈곤한 가족의 아동을 위한 복지 수준이나 체계가 허술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베이비박스에 대한 접근성이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 지원 서비스에 대한 것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일이다. 빈곤한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수준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담과 복지지원 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최근 입양특례법으로 촉발된 베이비박스에 대한 논란은 아동유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켰다. 빈곤한 가정의 아동유기 및 부모와의 아동분리를 당연시하는 후진적 인식에서 벗어나 이들을 지원하는 복지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유나, 2014. “규정 없는 베이비박스...경기도, 지원도 철거도 쉽지 않아” 국민일보, 2014. 5. 26
- 유아람, 2014. “‘베이비박스’ 늘려야 하나, 없애야 하나?” 2014. 3. 12 시사신문
- 이미정, 2013. “입양특례법 후퇴하면 안 된다” 중앙일보 2013. 4. 17.
- 이민지, 2013. “버려지는 아기의 임시보호 시설 베이비박스의 명암” 연합뉴스, 2013. 10. 25.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에 즈음하여¹⁾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I. 들어가며

서울가정법원은 2014. 5. 30.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표 1>과 같이 새롭게 공표하였다.

이번에 공표한 산정기준은 2012년 공표 이후 달라진 물가상승율과 전국 가구별 양육비 지출 규모를 조사한 금액을 반영²⁾하여 개정한 것이다. 이번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개정은 현실성 있는 양육비 산정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의미 깊다.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2012년 산정기준표와 달리진 특징적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해하기 쉬운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되고자 노력한 점이다. 그래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자녀 나이 구간을 기존에 0-2세로 표기하였던 방식을 0세 이상 3세 미만이라는 식으로 풀어쓰고 있고, 부모합 산소득 구간도 0-199 미만이라고 표기하였던 방식을 0-199만원 미만이라고 풀어쓰고 있다. 그리고 표안의 각 셀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표 안에서 위에 표기된 숫자는 월평균양육비를 의미하고, 아래의 숫자표기는 양육비 구간을 의미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둘째, 2012년에는 도시와 농촌을 구별하여 산정기준표를 별도로 제시하였는데, 통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014년에는 도시와 농어촌을 통합한 전국 평균 양육비표를 공표하고, 지역 요소는 개별적인 양육비

1) 본 원고는 2014. 5. 9. 서울가정법원이 주최한 양육비 산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제한 글을 일부 발췌하여 재정리한 글입니다.

2) 서울가정법원이 2012년에 마련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매 3년마다 조사하고 있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의 2009년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소득 및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자녀수 및 거주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것이다. 가구소득 및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갱신되어야지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초통계의 생산 주기(매 3년)에 맞춰 개정한 것이다.

〈표 1〉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단위 : 만원)

부모합산 소득	0~199만원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699만원	700만원 이상
자녀나이	평균양육비(월)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월)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월)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월)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월)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월)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월) 양육비 구간
0세이상 3세미만	52.6 20.0~58.9	65.3 59.0~70.7	76.1 70.8~83.3	90.6 83.4~95.8	101.2 95.9~105.9	110.6 106.0~131.5	152.6 (131.6~∞)
3세이상 6세미만	49 23.9~59.7	70.5 59.8~79.1	87.8 79.2~94.2	100.8 94.3~112.3	123.8 112.4~128.5	133.4 128.6~154.6	175.9 (154.7~∞)
6세이상 12세미만	53.3 18.5~62.0	70.8 62.1~80.4	90.2 80.5~98.0	105.9 98.1~113.0	120.2 113.1~128.6	137.1 128.7~163.8	190.6 (163.9~∞)
12세이상 15세미만	60.4 31.3~67.9	75.5 68.0~85.1	94.7 85.2~102.1	109.5 102.2~120.0	130.5 120.1~141.2	152 141.3~178.2	204.6 (178.3~∞)
15세이상 18세미만	60.8 34.3~72.5	84.4 72.6~97.9	111.5 98.0~115.9	120.4 116.0~131.4	142.4 131.5~154.6	166.8 154.7~196.8	227 (196.9~∞)
18세이상 21세미만	95.9 31.4~107.2	118.5 107.3~124.4	130.3 124.5~133.1	136.1 133.2~154.4	172.8 154.5~185.1	197.4 185.2~209.7	222.1 (209.8~∞)

출처 : 서울가정법원

가산, 감산 요소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자녀수에 대한 고려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2012년에는 양육자녀가 1인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하고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산치를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나, 2014년에는 우리나라 대표가구인 자녀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자녀 1인당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하고 있다.

넷째, 양육비 가산요소와 감산요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와 농어촌 등 거주지역을 달리하는 경우, 자녀수 2인을 기준으로 자녀수가 1인인 경우는 가산, 3인인 경우는 감산하고, 산정기준표가 감안하지 못한 부모의 재산상황, 중증 질환이나 장애로 인하여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나 부모 쌍방이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등이 그 예이다.

이하에서는 자녀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개정에 즈음하여 양육비 산정의 기본원칙과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필요성, 그리고 산정표의 마련뿐만 아니라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제대로 활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히며, 산정기준표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II. 양육비 산정의 기본원칙 : 양육비 기준 설정에 관한 근거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녀양육비 조사(2003, 2006, 2009, 2012)에 의하면, 자녀양육비의 월평균 지출액은 2003년 74만 8천원에서 2006년 91만 2천원, 2009년 100만 9천원, 2012년 118만 9천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자료: 김승권 외,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2006, 2009, 2012.)

자녀양육 질의 향상과 사교육비의 증가 등으로 부모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으며, 자녀 양육에 대하여 갖는 부모의 책임감은 상당히 커져,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에는 거의 희생에 가까운 정도로 부모의 관심이 지대한 반면,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을 때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한쪽은 자녀양육비를 적절하게 지원받지 못했을 때 자녀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혼한 사람들은 대체로 이혼 이후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락을 경험하게 되는데, 남성에 비하여 여성들이 더욱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은지 외(201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이 가장인 한부모 가족의 빈곤율은 25.1%로 1자녀 양부모 가족의 빈곤율인 8.7%, 2자녀 양부모 가족의 빈곤율인 5.9%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김은지 외, 2011:142-143). “특히 어머니가 자녀를 맡게 된 경우 이혼에 따른 정신적, 사회적 문제와 함께 경제적 문제가 심각한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된다. 현실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결혼과 함께 육아나 가사를 위해 자신의 일을 중단한 상당수의 여성들은 경력단절로 인해 재취업이나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기 때문이다(박복순, 2004:4).”

양육비의 사적 이전은 양육친과 자녀의 경제적인 안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서로 양육비를 주고받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도 많고, 또한 양육자 결정 비중을 보면 75% 이상이 어머니로 합의되고 있지만, 실제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이혼한 여성 한부모 가족의 빈곤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부모 가정에서 지출되는 양육

비를 기준으로 이혼 후의 양육비를 산정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사이에 양육비를 산정할 때 이혼 전의 상황에서 지출된 양육비를 기준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정당화 근거로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과 협약이 기초 원리로 삼고 있는 “자의 최선의 이익” 관점을 들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생명에 대한 고유권을 갖고, 그 생존, 발달을 위해 생활수준이 확보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27조). 제1차적 책임을 지는 부모는 그 능력, 자력의 범위에서 자녀의 발달에 필요한 생활수준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³⁾

‘자의 최선의 이익’을 존중한다는 것은 자녀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자의 최선의 이익」을 지침으로 하여 제1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이혼은 부득이하다고 해도 자녀에게는 양육환경의 중대한 변경이 된다. 부모가 헤어져 생활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생활비의 부담이나 교류 등 자녀의 이익을 위해 배려하는 것은 가능하다. 부모는 양육환경을 변화하지 않도록 양육과 자녀의 생활비의 분담에 관하여 결정을 하는 등 최대한 배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적 급부는 일방의 수입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부모가 함께 서로 분담하는 것이 자의 최선의 이익으로 된다.

따라서 자의 최선의 이익의 관점과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생존, 발달을 위해 필요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에게는 이혼 전과 동일한

3) 아동권리협약 제6조는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제7조제1항은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협약 제27조 제1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그 능력과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제1차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국가는 국내 여건과 재정의 범위 안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4항에서는 양육비의 확보에 관하여 국내외를 묻지 않고 양육 책임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한 온갖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렇듯 아동권리협약 제27조는 아동의 생활수준확보권과 사회보장권을 인정하고 있다.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가 합의에 따라 그와 같은 양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양육비를 결정한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나, 법원이 양육비를 결정할 때에도 이를 가장 큰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양육비 산정을 위한 기본 원칙이 그 사회에서 작동하는 지배이념과 동떨어질 경우 그 활용을 저해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활용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하고, 그 때문에 법적 강제기준이 없는 양육비 산정기준을 따르지 않고서 심판한다는 보고도 존재한다.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낸 양육비 산정기준이 당사자의 협의 기준과 실무상 판단 기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양육비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양육비 산정에 관한 기본 원칙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양육비 산정기준의 필요성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공표되기 이전의 상황은 민법 제837조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시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이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민법 제843조에서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 그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그동안 실무에서는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양육비에 대하여 종전에는 재판부마다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안마다 합리적인 양육비를 산정하여 왔으나, 이러한 실무 경향⁴⁾에 대하여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고, 국민과의 소통 및 이를 통한 법원의 신뢰 증진을 위하여 공식적인 양육비 산정기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소득을 고려한 양육비 산정기준을 논의하였고, 양육비 시민배심법정 개최 및 가사담당 법관을 대상으로 한 양육비 산정방법에 대한 설문 조사를 거쳐 2012. 5. 31.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하였다.

양육비 산정기준 마련은 2011년 말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⁵⁾되어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의 차원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문(법 제17조의3)이 추가된 것과, 2012년 3월부터 전국의 가정법원이 서울, 부산 외에 대전, 대구, 광주로 확대되어 가사사건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에서 2008년에 마련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갱신하여 전국의 가정법원으로 확산시킬 필요에 의해, 여성가족부와 서울가정법원의 업무협의를 통해 촉진된 면이 있다.

또한 내부 재판자료만으로 활용하지 않고 공표에 이른 것은, 2009년 5월 8일 부모의 이혼으로 자녀의

4) 일반적으로 양육비가 쟁점인 사건처리 시 법원은 양육하고자 하는 측에 소요항목과 금액을 제시토록 한 후 당사자간 합의를 시도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체로는 부모 공동부담 중 일방이 부담하는 부분을,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월 30만원 내지 50만원 사이에서, 경험적으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을 양육비로 산정하여 왔다(2005년 9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서울가정법원 199건 조사기준)(김해주, 2009:23 재인용)

5) 법률 제11291호, 2012. 8. 2.시행

복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않으면 협의이혼할 수 없게 하는 민법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양육비 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 점이 있다.

양육비 산정기준의 마련은 향후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 시 당사자로 하여금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양육비의 액수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커져 이혼 후 양육계획이 충실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과 양육비 담당재판부 역시 기준표를 근거로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으며, 기준표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은 당해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한 구체적인 양육비를 산정하도록 하여 양육비재판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하는 하급심 판례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더 많이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IV.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활용이 중요한 이유⁶⁾

2013년 과제⁷⁾ 수행 중에 2012. 5. 31. 서울가정법원이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공표한 이후 실제 재판에서 얼마나 활용되고 있으며, 활용된 경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원심의 선고일을 기준으로 2012. 6. 1.부터 검색일인 2013. 2. 5.까지 검색어를 '양육비'라고 넣어서 검색하여 전국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5개 지역 법원에서 선고된 양육비 결정례를 수집하여 분석한 바 있다⁸⁾.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활용은 분석대상 심판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례는 38건에 불과하여 아직까지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활용의 80% 이상(31건)이 서울가정법원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공표 이전과 이후의 결정 추이를 비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장래 양육비 결정된 사건을 기준으로 비교해 본 결과, 분석대상 판결(2012년 하반기 사건)에서 전국 5개 지역 법원을 종합적으로 보면 50만원 이하인 사건이 83.3%로 산정기준표 공표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서울가정법원 사건으로 한정해서 보면, 50만원 이하로 결정된 사건이 69.7%로 많이 줄어든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양육비 결정문에 부모의 소득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국 5개 지역 법원 기준으로 50만원 이하로 결정된 사건이 52.1%로 줄어들고, 서울가정법원을 기준으로 35.7%로 줄어든다. 산정기준표를 고려하였다고 판결문에 언급된 사건을 중심으로 보아도, 분석대상판결의 5개 지역 법원을 기준으로 50만원 이하의 결정례는 46.7%이고 서울가정법원 기준으로 50만원 이하의 결정례는 46.1%를 차지하고 있어 유사한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산정기준표 공표 이후 서울가정법원을 중심으로 한 결정례에서는 양육비가 상향 결정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고, 특히 결정례에서

6) 이하의 내용은 2013년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반연구사업인 「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Ⅱ)」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임.

7) 2013년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반연구사업인 「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Ⅱ)」:가족 관련 판례」에서는 친양자 입양 제도, 자녀의 성·본 변경 결정, 자녀양육비와 재산분할에 대한 판례 및 결정례를 분석한 바 있다.

8) 5개 지역에서 동일한 기간 '양육비'라는 검색어로 검색된 건은 총 1,315건으로, 이 중 양육비를 다루지 않거나 관련이 없는 사건 212건, 사전처분 사건 107건, 취하 사건 4건을 제외한 총 992건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표 2〉 양육비 산정기준 공표 이전과 이후의 양육비 결정 현황 비교

(단위 : 건, %)

구분 \ 양육비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7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총계
2011하반기 ⁹⁾ 서울	167(39.8)	181(43.1)	35(8.3)	28(6.7)	9(2.1)	420(100.0) 82.9
2013 서울	95(30.0)	123(39.7)	43(13.6)	34(10.7)	19(6.0)	317(100.0) 69.7
2013 전체	298(39.3)	334(44.0)	58(7.6)	50(6.6)	19(2.5)	759(100.0) 83.3
2013 서울 소득 유	4(14.3)	6(21.4)	8(28.6)	6(21.4)	4(14.3)	28(100.0) 35.7
2013 전체 소득 유	10(20.8)	15(31.3)	11(22.9)	8(16.7)	4(8.3)	48(100.0) 52.1
2013 서울 산정기준 고려	7(26.9)	5(19.2)	6(23.1)	5(19.2)	3(11.5)	26(100.0) 46.1
2013 전체 산정기준 고려	9(30.0)	5(16.7)	7(23.3)	6(20.0)	3(10.0)	30(100.0) 46.7

※ 구분의 2011년 하반기 서울이라고 표기한 란은 2011. 9.부터 2012. 2.까지 6개월 동안 서울가정법원에서 판결한 사건의 양육비 결정내용을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한 것이고, 나머지는 양육비 분석대상판결문 중 인용 사건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부모의 소득을 밝힌 경우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고려했다고 언급한 사례에서는 지역을 불문하고 양육비가 상향 결정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양육비 사건에서 각 사건별로 부모의 구체적인 소득수준과 자녀의 수, 필요한 양육비, 이혼 전 지출한 양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양육비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V. 마치며

앞에서 소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공표 이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활용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양육비 심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협의이혼 당사자들이 협의의 기준점으로 삼는 경우와 조정제에 이른 경우 하나의 기준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에서의 활용도를 감안한다면 이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

그리고 소수이지만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활용했다고 밝힌 사례와 양육비 산정기준 시 고려되는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연령정보를 담고 있는 사례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례보다 양육비가 높게 책정되고 있고, 공표된 산정기준표에 근접하게 책정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때, 제대로만 활용된다면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기초한 현실성 있는 양육비의 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또한 양육비를 둘러싼 법의 변화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활용 가능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즉, 2014년

9) 양육비 산정기준표 공개에 앞서 2011. 9.부터 2012. 2.까지 6개월 동안 서울가정법원에서 판결한 사건의 양육비 결정내용을 조사한 결과, 자녀 1인당 월 30만원 내지 50만원이 8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5. 9.부터 2006. 9.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을 조사한 결과에서 50만원 이하가 전체의 89.9%를 차지하였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서울가정법원, 2012:3).

3월 24일 법률 제12532호로 공포되어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는 기관인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육비에 관한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원만한 협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협의성립이 이루어질 경우 협의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하게 된다. 따라서 2015년 3월 25일부터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는 기관인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한 당사자들의 양육비 상담 및 그 협의 지원과정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활용될 예정이어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활용에 대한 기대를 더욱 크게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1차 양육비 산정기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려고해도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남아 있다. 양육비의 이행확보의 수단이 강화된 만큼 양육비 책정의 현실성 담보를 위한 양육비 사건 담당 판사들의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며,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양육비 산정 시 부모의 합산소득 및 자녀의 연령이 기초가 되더라도 불구하고 심판례에 적시되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었다는 현실은 우려스럽다. 향후 양육비 산정기준의 갱신을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한다는 목적과 함께 보다 정직한 양육비 산정에 고려된 요소와 그 경과에 대한 자료가 기술되어 보존되고, 그 분석을 주기적으로 행함으로써 양육비 산정기준이 구체적이고도 현실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김승권 외(2004, 2006, 2009, 201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은지·장혜경·이미정·최인희·김혜영·여유진(2011). 청소년한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자립지원방안 등 연구, 여성가족부.

박복순·송효진·전경근·현소혜(2013). 여성가족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복순(2004). 자녀 양육비 확보제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서울가정법원(2012).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서울가정법원(2014). 양육비 산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2014. 5. 9.).

아동양육비 지원체계 국제비교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본고에서는 최근 정책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 양육 비선지급을 독일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¹⁾ 먼저 양육비선지급을 독일 사회보장 체계 내 하나의 급여로서 강조하는 내용을 제시한다. 양육비선지급이 갖는 사회보장 체계 내 급여와 소득 보장 수단으로서 특징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더 나아가, 양육비선지급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제시한다.

1. 아동양육비의 개념

아동양육비는 표현 그대로 아동양육을 위하여 가족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양육비 지출 주체로서 가족 입장에서 볼 때 아동양육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아동양육을 위하여 직간접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다. 둘째, 기회비용으로서 아동양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취업활동소득 감소이다. 아동이 17세가 될 때까지 가족이 지출하는 비용이 약 5만 파운드에 이른다고 한다면, 이는 아동양육을 위한 지출 비용의 예가 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가족, 특히 대부분 엄마가 아동양육으로 인하여 포기하는 취업 활동 임금이나 경력 등 기회비용까지 포함하면 아동 양육비는 같은 경우에 약 20만 파운드 가량이 된다. 기회비용에 속하는 소득은 취업활동 중단, 취업활동 단축, 재취업했지만 아동양육으로 인하여 단축된 경력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임금 손실이 있다(Middleton et al., 1997; Pahl, 2007: 185에서 재인용).

아동양육비를 지출비용과 기회비용으로 분류할 때 양육비 지원체계도 전자를 지원하는 체계(지출비용 지원체계)와 후자를 지원하는 체계(기회비용 지원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체계)로 나눌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전자에는 출산 비용 지원, 아동수당, 양육비 지원, 보육료 지원 등이 있다. 후자에는 부모수당, 가족친화직장환경 조성 지원, 재취업지원 등이 있다.

2. 사회보장체계 내 양육비 지원체계의 위상

공적이전체계로서 사회보장제도의 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하는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최저보장(Mindestsicherung) 급여가 있다. 둘째, 최저보장에 속하지 않는 추가보장 개념의 급여가 있다.

최저보장에 속하는 공적이전급여(Transferleistungen der sozialen Mindestsicherung)에는 전쟁피해자부조(Kriegsopferfürsorge), 망명신청자지원급여(Asylbewerberleistungen)와 기초보장(Grund-sicherung)급여가 있다. 기초보장급여는 다시 근로능력자 대상 실업급여Ⅱ와 근로무능력자 대상 사회부조(Sozialhilfe)가 있다(Statistisches Ämter des Bundes und der Länder, 2012:7).

추가보장 급여로는 취업훈련지원(Berufsausbildungshilfe), 부모수당(Elterngeld), 장애급여(Leistungen zur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아동수당(Kindergeld),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양육비선지급(Unterhaltsvorschussleistungen), 아동·청소년지원(Kinder- und Jugendhilfe), 모성수당(Mutterschaftsgeld), 의사상자 및 전쟁피해자 지원(Soziale Entschädigung und Kriegsopferversorgung)이 있다.

가. 최저보장으로서 아동양육비 지원

최저보장제도 중 아동 양육으로 인한 지출비용 지원은 최저보장 수급자가 아동을 부양할 경우이다. 따라서 아동 자체를 대상으로 한 양육비 지원체계로 보기는 어렵다. 최저보장제도는 가장(Haushaltsvorstand) 1인의 기초생계비를 100%로 하고 가족 구성원의 수급급여를 배우자는 90%, 부양자녀들은 연령에 따라 60-80% 선에서 정한다. 이를 규정급여(Regelsatz)라고 한다.

2014년 현재 가장 1인의 규정급여는 391유로이다. 규정급여는 독일 연방 통계청(das Statistische Bundesamt)과 주 통계청(die Statistischen Landesämtern)이 5년마다 실시하는 최저생계비 조사를 통해 결정한다.²⁾ 가장 최근 조사는 2013년에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2014년 규정급여 100% 수준액을 391유로로 정한 것이다. 기초보장 급여 수급시

〈표 1〉 규정급여액(2014년 기준)

규정급여 등급	가구 구성원	수급액(월)	규정급여 등급	가구 구성원	수급액(월)
I	가장(한부모 가족 가장 포함)	391 €	IV	부양아동(14-17세)	296 €
II	배우자	353 €	V	부양아동(6-13세)	261 €
III	24세 이하 1인단독가구원	313 €	VI	부양아동(6세 미만)	229 €

출처 : BMAS(2014:4).

2) 독일 연방통계청(<http://www.destatis.de/jetspeed/portal/cms>).

아동부양 가족은 이 규정급여 등급에 따라 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29유로, 6-13세 아동 1인당 월 261유로, 14-17세 아동 1인당 월 296유로의 최저생계비 이자 양육비용 지원을 받는다고 보겠다(표 1).

나. 추가보장으로서 아동양육비 지원

추가보장으로서 부양아동 양육비용 지원은 그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묵시적 바우처(Voucher) 형태이다. 자녀양육 가족이 서비스를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형태이다. 둘째, 자녀양육 가족에게 현금을 지불하는 형태이다. 본고에서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이다.

1) 묵시적 바우처 형태

독일에서도 바우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교육 바우처(Bildungsgutschein)라고 하여, 예를 들어, 취업훈련으로서 컴퓨터 과정을 이수하려고 할 경우 과정 등록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다. 반면 눈에 보이는 증서 형태로 제공하지는 않지만 자녀양육이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우처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면서 발생 비용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양육비 지원 체계가 있다.

그 내용으로서, 첫째, 의무교육 과정 졸업 후 취업 때까지 이른바 ‘이행기(Übergangsphase)’ 자녀의 취업훈련 지원이 있다. 취업실습과 직업학교(Berufsschule) 교육을 병행하는 이중체계(das

duale System)에서 직업학교 교육을 공교육으로서 무료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장애자녀가 태어나서 조기 발견, 치료, 교정,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조기치료센터, 상담소, 특수학교 등 각종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물론 각 주 별로 급여 내용이나 수준 차이가 있긴 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녀의 장애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6세 미만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료 지원이 있다.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볼 때 보육료는 이용 시간과 부모의 소득³⁾에 비례하여 지불한다. 예를 들어⁴⁾, 연 소득 17,500유로 이하 저소득 가구는 보육 시간에 상관없이 보육료 부담을 전혀 하지 않는다. 연 소득이 17,500유로⁵⁾ 이상 25,000유로 미만 가구가 하루 5시간 주 5일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에는 월 25유로의 보육료를 지불한다. 같은 시간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연 소득 125,000유로 이상 고소득 가구는 해당 비용 월 213유로 전액을 보육료로 부담해야 한다.

넷째, 아동·청소년지원은 양육자녀가 성장 과정에서 갖게 되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상담, 심리치료, 특정 과정 이수 등을 통해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자녀양육 가족이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경우 서비스 발생 비용을 국가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지불하게 된다.

2) 현금급여 형태

아동양육 비용을 현금으로 직접 지불하는 형태로는

3) 총소득(Bruttoeinkommen), 즉 세전소득을 의미한다.

4) 독일 하겐(Hagen)시 제공 자료이다.

5) 약 2천6백만원(1유로 = 1,500원 기준).

아동수당과 양육비선지급이 있다.

가. 아동수당

1955년 아동수당을 처음 지급할 때 대상은 세 번째 출생 아동부터였다. 이후 1961년에는 두 번째, 1975년부터는 첫 번째 출생 아동으로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가장 최근 아동수당액 인상은

2010년에 있었으며 그 이후 첫째 · 둘째 자녀까지는 월 184유로를, 셋째 자녀에게는 190유로를, 그리고 넷째 자녀부터는 월 215유로를 지급하고 있다(표 2). 예를 들어 양육 자녀 4명이 있을 경우 2002년에는 모두 641유로, 2009년에는 683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2010년 인상 이후에는 현재 같은 상황에서 773유로를 지급받고 있다.

〈표 2〉 아동수당 지급액 변화 추이

아동	2002년 - 2008년	2009년	2010년 이후
첫째 자녀	154 €	164 €	184 €
둘째 자녀	154 €	164 €	184 €
셋째 자녀	154 €	170 €	190 €
넷째 자녀 이상	179 €	195 €	215 €

출처 : 연방고용센터(Bundesagentur für Arbeit)⁶⁾

나) 양육비선지급

양육비선지급법(Unterhaltsvorschussgesetz)을 198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정식 법령칭은 2007년 6월 17일 공포한 ‘Gesetz zur Sicherung des Unterhalts von Kindern alleinstehender Mütter und Väter durch Unterhaltsvorschüsse oder -ausfallleistungen’이다. 양육비선지급은 본론에서 상술하도록 한다.

다. 기회비용 보상으로서 양육비 지원체계

아동양육으로 인하여 취업활동을 중단할 경우 발생하는 기회비용 보상은 출산 전후 취업활동 중단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상해주는 모성수당과 출산 후 양육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상해주는 부모수당

이 있다.

1) 모성수당

모성수당(Mutterschaftsgeld)은 출산여성이 수급 자격을 갖는다. 지급주체는 출산여성이 속해있는 의료보험조합이다. 따라서 출산여성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보험조합이 지불하는 모성수당 지급액 수준은 하루 최고 13유로까지로 유동적이다. 결국 모성수당액 수준은 의료보험조합 지급 하루 최고 13유로에, 출산여성이 모성보호 기간 시작 전 3개월간 올린 순소득(Nettoentgelt)의 평균을 1일로 나눈 액수를 더한 것이 된다. 의료보험조합 지급 모성수당이 이 금액을 넘지 않을 때 차액은 사용자가 지불한다. 모성보호 기간 중 실업자가 된 여성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조합에서 질병수당(Krankengeld)에

6) http://www.arbeitsagentur.de/nn_26532/zentraler-Content/A09-Kindergeld/A091-steuerrechtliche-Leistungen/Allgemein/Dauer-und-Hoehe.html

해당하는 금액을 모성수당으로 지급한다.

모성수당액이 유동적인 반면, 지급 기간은 모성보호법(Mutterschutzgesetz: MuSchG)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모성수당 지급 기간은 출산 전 6주, 출산 당일 하루, 출산 후 8주로 정해져 있다. 다만 조산이나 다둥이 출산 시에는 출산 후 12주로 연장된다.

2) 부모수당

독일 복지국가는 보수주의 복지레짐으로 분류하고 있다(Esping-Andersen, 1990). ‘남성 = 취업활동자, 여성 = 가사·돌봄노동 담당자’라는 성별노동분리를 전제로 한 사회정책·가족정책에 기초한 복지국가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후기산업사회의 고용불안의 상시화(Prekarisierung), 취업활동과 자기경력을 중시하는 여성의 가치관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저출산 현상의 지속은 그러한 정책 기조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1986년부터 실시한 아동양육수당(Kindererziehungsgeld)을 대체하여 남성의 아동양육 참여를 자극할 수 있는 시도로서 부모수당(Elterngeld)을 2007년부터 도입하였다. 기존 아동양육수당이 정액제 월 300유로 지급에서 벗어나 자녀 출산 후 휴직하는 부 혹은 모에게 월소득의 67%, 최고 1,800유로를 지급하는 부모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부 혹은 모 1인은 부모수당 수급 기간인 부모시간(Elternzeit) 14개월 중 최대 12개월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소 2개월은 부모 중 한 명, 대개의 경우, 남성이 사용하게 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낮은 수준의 정액제가 아닌 소득대체율 67%의 정율제 수당을 지급하고 부모가 14개월 전 기간

급여 수급을 하려면 부모가 모두 부모수당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라. 사회보장 체계 내 아동양육비 지원 수단으로서 양육비선지급

가족이 아동을 양육할 때 부담하는 비용은 양육비용을 지출하는 형태와 아동양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취업활동 포기 등 기회비용으로 분류한다. 가족이 지출하는 아동양육 비용을 보상하는 체계는 다시 최저보장 체계와 추가보장 체계로 나눌 수 있다. 최저보장 체계는 단위로서 가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독자적 아동양육비 지원체제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추가보장 체계 중 아동을 수급권자로 하는 급여를 아동양육비 지원체계 구성요소로 볼 수 있다. 수급권자로서 아동을 지원하는 급여의 형태는 다시 바우처와 현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바우처 형태의 양육비 지원체계에는 취업훈련지원, 장애급여, 보육료 지원, 아동·청소년 지원이 있다. 현금 형태의 양육비 지원에는 아동수당과 양육비선지급이 있다. 모성수당과 부모수당은 아동양육의 기회비용 지원이기 때문에 아동을 수급권자로 하지 않는다.

이상 내용을 바탕으로 양육비선지급이 아동양육비 지원체계에서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비선지급은 최저보장이 아니라 아동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추가보장의 하나이다. 아동의 최저생계는 최저보장으로서 기초보장(Grundsicherung) 급여가 보장해준다. 둘째, 양육비선지급은 수급자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는 현금급여이다. 수급자의 급여 처분권을 제한하는 바우처 형태가 아니다. 셋째, 양육비선지급은 양육부모가

갖게 되는 양육으로 인한 기회비용 지원이 아니다. 아동양육 때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지출비용 지원으로서 특징을 갖는다.

이상 내용을 요약하면, 양육비선지급은 '아동양육을 위하여 부모가 지출하는 비용을 직접 보전해주는 현금 급여로서 추가보장 급여 중 하나'로 정의할 수 있다.

〈표 3〉 추가보장으로서 아동양육비 지원체계

지출비용 지원		기회비용 지원
목시적 바우처 형태	현금급여 형태	
취업훈련지원	아동수당	모성수당
장애급여		
보육료 지원	양육비선지급	부모수당
아동·청소년지원		

3. 양육비선지급

1960년대 말 이른바 68혁명을 겪으면서 시작한 유럽사회의 가치관 변화, 사회운동의 전개, 신여성운동의 등장은 독일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 중 하나가 전통적 가족구조로서 핵가족의 붕괴이다. 그 결과 1970년대를 거치면서 한부모 가족 증가도 가족정책적 관심사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독일 연방정부는 1978년 독신모 가족 양육비 실태조사(die Praxis der Unterhaltsleistungen für alleinerziehende Mütter und ihre Kinder)를 통해 조사대상 한부모 가족의 약 1/3이 최소한 한번 정도는 이혼(별거) 배우자의 불규칙적인 양육비 지급으로 문제를 겪은 경험이 있으며, 양육자녀 연령이 2세

이하일 경우에 특히 양육비 조달에서 더 자주 문제가 나타남을 밝혀냈다. 어린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아동돌봄으로 인하여 취업활동을 제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BMFSFJ, 1998:105).

가. 사회보장제도로써 양육비선지급

양육비선지급은 아동양육 때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아동양육비 지원체계 중 하나이다. 독일 사회보장제도를 각 분야가 지향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예방, 보상, 지원, 기초보장'하는 제도로 분류할 수 있다. 이때 양육비선지급은 '지원'을 주기능으로 추구하는 소득보장 분야에 속한다(표 4).

〈표 4〉 기능별 사회보장제도 분류 - 양육비선지급의 위상

예방	보상	지원	기초보장
질병보험	전쟁피해 보상	교육·취업 훈련	구직자 기초보장
사고보험	구동독체제 피해 보상	사회서비스	
연금보험	군인희생 보상	아동수당	
실업보험	예방접종 피해 보상	부모수당	사회부조
수발보험	범죄 피해 보상	주거수당 양육비 선지급	

나. 수급 자격

양육비선지급 수급 자격은 아동이다. 수급 대상자로서 아동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양육비선지급법 1조).

- ① 12세 미만
- ② 한부모 혹은 별거·사별 부모와 동거
- ③ 비별거 부 혹은 모로부터 적절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사별 포함)
- ④ 독일 국내 거주
- ⑤ 외국인 영주권자

독일 국적자가 아니더라도 12세 미만으로서 영주권을 갖고 독일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정에서 사는 경우에 양육비선지급 대상 아동이 된다.

양육비 선지급을 수급하려면 양육비 지급 의무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양육비선지급법 6조). 만약 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양육비 선지급 수령을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양육비 지급 의무자 관련 정보를 양육비선지급 신청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모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게 되면 양육비선지급을 할 수 있다. 만약 양육비 지급 의무자 관련 정보와 관련하여 신청자와 담당 관청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법원(Verwaltungsgericht)에서 양육비선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양육비선지급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첫째,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이미 법정 최저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이다. 둘째, 양육비 선지급 신청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확인된 때이다. 셋째, 양육비선지급 신청자가 재혼할 경우이다(양육비선지급법 6조).

다. 수급 기간

양육비선지급 기간은 최대 72개월이다. 72개월 수급 기간 중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하여 12세에 도달했을 때 발생하는 미수급월 분 양육비는 소급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일 기준으로 이미 수급자격을 충족한 채 지나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급을 해야 한다(양육비선지급법 3조). 예를 들어 5세 전에 벌써 양육비선지급금을 48개월 수령했으면 12세에 도달하기 전까지 24개월을 넘어서 받을 수가 없다.

라. 양육비선지급 재정

양육비선지급을 위한 재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50%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역 지자체(Kommune)가 부담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phalen) 주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해당 소요 재정의 33.3%, 주정부가 13.2%, 그리고 지자체가 53.5%를 부담하고 있다.⁷⁾ 이러한 부담 비율은 양육비선지급법 8조에서 명시해 놓은 것이다.

〈표 5〉 양육비선지급 재정 분담 구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사례(2014년)

연방정부	주정부(Nordrhein-Westphalen)	지자체(Stadt Hagen)
33.30%	13.20%	53.50%

7)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하겐(Hagen)시 양육비선지급팀 팀장 에리카 라이프-마이어 인터뷰(2014년 5월 2일).

마. 양육비선지급 업무 관련 주체

1) 지자체 청소년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소요 재정의 약 50%를 부담하는 것 외에 양육비 전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역할은 없다. 양육비선지급 업무는 지자체(Kommune) 소관이다. 지자체는 양육비선지급 예산을 ‘양육비선지급 금고(Unterhaltsvorschusskasse)’라는 명칭으로 확보하고 청소년국(Jugendamt)에서 양육비선지급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청소년국 양육비선지급 담당팀은 양육비선지급 신청을 받고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양육비 지급 의무자, 지급 의무자가 근무하는 직장의 사용자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 및 구상권 행사 관련 정보를 고지한다. 더 나아가, 신청이 있을 경우 양육비선지급 담당팀이 파악한 양육비 지급의무자 관련 정보를 양육비 수급아동의 부양자 혹은 법정 후견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도 한다.

2) 양육비 지급 의무자와 관련 기관

양육비 지급 의무자는 지자체 청소년국 양육비선지급 담당팀이 요청하는 본인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 지급 의무자가 근무하는 직장의 사용자, 보험회사와 은행 등 금융기관, 지급 의무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및 복지급여 제공 기관, 그리고 지역 세무서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고용관계, 근무지, 급여 등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 특히 양육비 지급 의무자와 사용자가 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물론 사용자나 보험회사는 정보 제공이 본인 이해관계를 해친다고 판단할 때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부양비 지급의무자가 사회보험 미가입자이거나 불법 고용 관계를 가질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러한 고용관계를 문제시 삼아 정보 제공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⁸⁾

〈표 6〉 양육비 지급 관련 주체들과 해당 의무

주체	의무
청소년국(Jugendamt)	양육비 수급아동의 부양자 혹은 법정후견인이 신청할 경우, 담당관청이 파악한 양육비 지급의무자 관련 정보 제공
	연방세무청(Bundeszentralamt für Steuer)을 통해 금융기관(Kreditinstitut)가 보유한 양육비 지급의무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양육비 지급의무자	담당관청이 요청하는 본인 정보를 제공
양육비 수급아동의 부양자 혹은 법정후견인	양육비 수급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즉시 담당관청에 고지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사용자 ⁹⁾	담당관청이 요청하는 양육비 지급의무자 고용 관계, 근무지, 급여 등 정보 제공
보험회사	담당관청이 요청하는 양육비 지급의무자 거주지, 소득 수준 등 정보 제공
사회서비스 및 복지급여 제공 기관, 지역 세무서 ¹⁰⁾	담당관청이 요청하는 해당 기관 보유 양육비 지급의무자 관련 정보 제공 (거주지, 직장, 소득 수준 등)

출처 : 양육비선지급법(Unterhaltsvorschussgesetz) 6조를 토대로 재구성.

8)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하겐(Hagen)시 양육비선지급팀 팀장 에리카 라이프-마이여 인터뷰(2014년 5월 2일).

9) 사용자나 보험회사는 정보 제공이 본인 이해관계를 해친다고 판단할 때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10) 기초보장, 주거수당, 취업 지원 등 사회법 10권 69조에서 규정하는 각종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제공 기관.

바. 급여 수준

선지급 양육비 액수는 민법의 미성년아동 최저부양비 규정(민법 1612a)과 소득세법 32조 6(1)에서 제시하는 아동부양공제액의 2배 수준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1990년 통일 이후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지역 간 선지급 양육비 수준이 차이가 났으나, 2008년부터 단일화되었다.

선지급하는 양육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2014년 현재, 5세까지는 133유로, 6세에서 11세까지는 180유로이다. 이 액수가 결정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2014년 현재 소득세법상 아동부양공제액

(Kinderfreibetrag)(A)은 연 2,184유로이다. 그리고 아동 1인당 연간 기준최저생계비는 아동부양공제액의 두 배로 잡고 있다. 그리고 아동 연령별 최저생계비는 아동이 5세 이하일 경우 기준 최저생계비의 87%로, 6-11세까지는 최저생계비의 100%, 12-17세까지는 117%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양육비선지급 대상 아동연령은 12세 미만이므로 12세 이상 아동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여기에, 앞서 밝힌대로, 추가보장으로서 아동수당 수령액을 제하게 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2014년 현재 월 아동수당(B) 184유로를 받는 첫째·둘째 아동의 경우 다음 수식을 거쳐 연령별로 각각 133유로, 180유로의 양육비를 선지급받는다.

〈표 7〉 아동 연령별 선지급 양육비 수준(월)

0-5세	6-11세
$[(A \times 2) \div 12 \times 0.87] - B$	$[(A \times 2) \div 12 \times 1] - B$
$[(2,184 \times 2) \div 12 \times 0.87] - 184$	$[(2,184 \times 2) \div 12 \times 1] - 184$
133유로	180유로

사. 양육비선지급 관련 이슈

1) 정책 효과 저해 요인으로서 추가보장과 기초보장 간 충돌

선지급하는 양육비는 추가보장 급여로 분류한다. 따라서 양육비선지급을 받는 가장이 기초보장(Grundsicherung)을 신청할 경우 기초보장 수급액에서 선지급 양육비를 공제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규정급여에 따라 부양자녀 당 양육비를 계산하여 기초보장 급여 수준을 정할 때 선지급 양육비만큼 감액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지역 고용센터(Jobcenter)에서 기초보장을 신청하는 한부모는,

해당 연령 부양아동이 있을 때, 반드시 양육비선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자녀양육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본래 정책 의도를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2) 부양의무자 제공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부양의무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어나게 된다. 먼저, 아버지의 존재를 밝혔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 발생을 원치 않기 때문에 자녀양육 당사자가 양육비 지급의무자

정보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분쟁이 발생하고 여기에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생겨난다.

더 나아가, 양육비선지급 신청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자 관련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검증이 불가능한 현실이 있다. 이때 담당 공무원은 매우 구체적으로 임신 관련 시간, 상황, 장소 등 정확한 정보를 물어보고 확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또 다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생겨난다. 또한 확보한 정보의 사실 여부를 검증할 인력과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¹¹⁾

3) 구상권 청구

양육비 선지급법 7조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선지급

양육비를 양육비 지급 의무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양육비선지급법 7조). 그러나 회수율 자체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독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구상권에 따른 비용 회수율은 굉장히 높을 경우 약 30%, 그렇지 않으면 평균 20% 수준을 상회하는 정도이다.

비교적 보수적 색채가 강한 바덴-뷔르템부르크(Baden-Württemberg)와 바이에른(Bayern) 주 경우는 다른 주와 비교할 때 30% 수준에 달하는 양육비 회수율을 보인다. 반면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 등 광역 대도시와 튀링겐(Thüringen) 등 구동독 지역은 10% 수준의 낮은 양육비 회수율을 보인다.

〈표 8〉 구상권에 따른 양육비용 회수율

(단위 :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바덴뷔르템베르크	26	22	25	27	28	26
바이에른	30	27	27	32	34	27
베를린	13	12	13	13	13	12
브란덴부르크	13	11	13	15	14	13
브레멘	11	10	10	11	12	10
함부르크	12	12	13	14	15	13
헤센	18	16	16	16	18	16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	13	12	14	13	14	13
니더작센	19	16	24	22	23	20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18	16	17	18	19	18
라인란트 팔츠	23	22	23	25	26	23
자를란트	17	20	18	20	23	17
작센	17	16	17	15	13	14
작센 안할트	15	15	16	14	15	13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21	18	20	21	22	19
바이마르	13	11	14	13	14	13
총계	20	17	19	19	20	18

출처 : Deutscher Bundestag(2011:4).

11)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하겐(Hagen)시 양육비선지급팀 팀장 에리카 라이프-마이어 인터뷰(2014년 5월 2일).

구상권 행사에 따른 선지급 양육비 회수율은 이혼·별거 전 가족 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그 관계가 좋을 경우에는 양육비선지급의 필요성도 감소하고 선지급한 양육비 회수율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¹²⁾

또한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소득 수준과 취업활동 여부도 회수율 관련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해당 지역 사회의 실업율과 기초보장 수급자 비율이 높을수록 선지급 양육비 회수율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앞서 낮은 회수율을 보인 광역 대도시로서 베를린의 실업률은 2014년 5월 현재 11.1%이다. 같은 기간 함부르크 7.6%, 브레멘은 10.8%이다. 튀링엔 등 구동독 지역 실업률은 9.7%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구서독 지역 평균 실업율은 5.9%이다. 반면 바이에른 주 실업율은 3.6%,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실업율은 3.9%이다.¹³⁾

4. 결론

독일의 아동양육비 지원체계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첫째, 최근 정책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양육비선지급은 전체적인 양육비 지원체계 내 하나라는 점이다. 또한 양육비 지원체계는 사회보장 체계 내 소득보장 분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양육비선지급은 ‘사회보장 → 소득보장 → 양육비선지급’이라는 구조에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소득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기능하고 있다. 양육비선지급 하나로써 아동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녀 출생 이후 임신·출산에 따른 기회비용

상쇄, 보육료 지원, 일반적 양육비용 지원으로서 아동수당, 장애·비행·학교 부적응 등 특수상황 발생 시 자녀돌봄 비용 지원, 이행기 자녀의 취업 지원 등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 체계 확립을 전제로 할 때, 양육비선지급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독일의 경우 선지급 양육비를 추가보장 급여로 분류함으로써 양육비 지급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 양육비를 선지급받는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지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경우 한부모 가족 지원으로서 아동양육비를 수령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선지급 양육비를 기초보장 혹은 추가보장으로 확정할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선지급한 양육비 회수 과정에서 회수율을 높이는 문제이다. 이는 독일의 경우가 보여주듯이 실업율 등 취업노동시장 상황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문제이다. 따라서 양육비선지급 정책 하나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게다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는 문제도 간단하지는 않다. 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적정 공무원 수가 어떠한 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담당 공무원 수 확대로 회수율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 지출 부담이 있다.

결국 양육비선지급 단독으로 아동양육비 지원체계를 구성할 수는 없음을 보게 된다. 아동양육비는 사회보장 체계 맥락에서 다른 사회보장 급여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12)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하겐(Hagen)시 양육비선지급팀 팀장 에리카 라이프-마이어 인터뷰(2014년 5월 2일).

13) <http://statistik.arbeitsagentur.de/Statistik-nach-Regionen>.

참 고 문 헌

박복순 외(2013), 외국의 양육비 이행지원기관 법제와 운영 사례 분석 및 제정 법률안 지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BMAS(2014), Entwurf einer Verordnung zur Bestimmung des für die Fortschreibung der Regelbedarfsstufen.

BMFSFJ(1998), Frau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eutscher Bundestag(2011), Rückquote beim UVG.

Esping-Andersen, Gösta(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 Press.

Middleton, S., Ashworth, K. and Braithwaite, I.(1997), Small Fortunes: Spending on Children, Childhood Poverty and Parental Sacrifice, York: Joseph Rowntree Foundation.

Pahl, Jan(2007), "The Family and Welfare," in: Baldock, John et. al.(2007), Social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pp.171-206.

Statistisches Ämter des Bundes und der Länder(2012), Soziale Mindestsicherung in Deutschland - 2010.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의 의미와 주요 내용¹⁾

차인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1. 들어가며

2014년 4월,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지 10여년 만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의 전부개정이 의결되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지 20년 만에 정책방향의 전환을 이룬 것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법은 문제 해결의 완성이라기보다는 문제 해결의 시작에 가깝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전환 역시 새로운 시작을 가리킨다.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으로서 더욱 더 그러하다. 이 글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환되기까지의 입법과정을 간략히 소개하고, 전부개정된 법의 내용을 현행 여성발전기본법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입법과정

1) 입법 준비 : 17대국회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환하자는 논의는 공식적으로는 2004년 발간된 여성부와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보고서들로부터 시작되었다.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발전기본법안과 남녀평등기본법안의 절충안이었는데, 그 당시 입법과정에서도 이미 ‘여성발전’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모호하고 또 여성정책의 중점이 여성발전, 여성의 지위향상에서 남녀평등으로 전환되고 있는 국제여성정책의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1) 이 글은 국회여성가족위원회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전적으로 개인의 견해임.

2) 김엘림 외(2004a),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의 발전」, 여성부·한국여성개발원, 김엘림 외(2004b), 「여성발전기본법의 효과 및 발전방향」, 연구보고 2004-43, 여성부

(김엘림, 2004a, 129). 이 보고서들의 내용은 이듬해 국회여성정책포럼 전문가간담회에서 ‘성평등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이라는 주제로 다뤄지기도 했으며, 국회여성위원회 차원에서 입법연구용역이 실시되기도 했다.³⁾

2) 입안 그러나 임기말 폐기 : 18대국회

18대국회는 여성정책의 환경이 매우 어려웠던 시기였다. 여성부 폐지 논의가 있었던 시기이고 더불어 국회에서 여성정책과 관련된 논의도 소극적인 분위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9년 1월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을 위원회안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하고 3월 26일 제281회 여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09년도 위원회 업무계획 차원에서 이를 발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⁴⁾

성평등기본법 시안추진을 위해 9명의 입법자문위원회를 각 당 추천형식으로 위촉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⁵⁾ 또 자문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당의 전문위원과 위원회 전문위원실로 구성된 실무지원단을 운영하였으며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여성부 관계자도 읊저버로 참석시켰었다. 여성단체와 여성정책 관련 기관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2월과 6월에 2차례의 토론회도 개최하였다.⁶⁾ 완성된 시안은 그 해 11월 23일 자문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제출하였고 위원회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비로서 시작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후 여야의 논의가 최초의 합의와 달라지게 되면서 안타깝게도 위원회안에 대한 공청회를 잡는 문제부터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 되었다.⁷⁾ 결국 위원회안으로의 추진은 무산되었고,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안은 이듬해 6월에 신낙균의원 대표발의로 성평등기본법안으로 제안되었다. 뒤이은 11월에는 정부의 의견을 담은 여성정책기본법안도 제출되었다.

두 법안에 대하여는 2011년 3월에 공청회가 열렸다. 하지만 당시 교섭단체였던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으로부터 추천받은 진솔인들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고⁸⁾, 입장의 대립 말고는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11월까지 3차례 법안소위원회에 올라갔으나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

3) 입법 : 19대국회

19대국회는 공식적으로 2012년 5월 30일부터이나 사실상 7월 9일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2012년 하반기는 2008년부터 연속되어 온 총격적인 아동성폭력 사건 문제에 대응하여 국회성폭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입법활동에 주력한 시기였다. 18대 국회에 이어 여성발전기본법의 전부개정 문제는 2013년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3년 12월에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안과 2014년 1월에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평등기본법안

3) 김엘림(2005), “성평등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국회여성정책포럼 전문가간담회 진수석 의원실, 2005.12.13., 장영민 외(2006), 「여성발전기본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06-2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4) 참고로 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4년마다 개원시기에 맞추어 지난 국회의 입법성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국회가 다루어야 할 입법과제를 제시하는 자료집을 발간하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실에 배포하여 왔다. 18대 국회를 위하여 만들어진 입법자료집에서도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할 필요성에 대하여 제시한 바 있다.〈17대국회 성평등 관련 입법현황 및 향후과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입법자료집, 2008. 6. 931쪽

5) 상세한 내용은 〈성평등기본법 시안연구 결과보고서〉, 국회여성위원회 성평등입법정책자문위원회, 2009.11 참조

6) 「여성발전기본법」입법평가 토론회 자료집, 국회여성위원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2 국회의원과관 제3간담회실, 「성평등기본법」입법 토론회 자료집, 국회여성위원회, 2009. 6 국회의원과관 제3간담회실

7) 제284회(정기회) 여성위원회 제7차 회의록, 10쪽

8)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11. 3. 10

으로 다시 제안되었다.⁹⁾ 이 두 법안은 이전 법안들을 기초로 더 체계화되고 수정, 보완된 형태였다. 때문에 상호보완적이었고, 수렴가능한 안들이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2014년 2월 21일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진솔인들의 진솔도 법령과 추진체계의 위상 정도를 제외하고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¹⁰⁾ 이 후 이 법안은 빠른 속도로 심사과정을 거쳤고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3. 전환의 의미와 주요 내용

가. 전환의 의미

양성평등기본법의 체계를 최근에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2014. 7. 1. 시행)과 비교해보면 양성평등기본법은 체계와 내용의 측면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을 확대, 강화 그리고 체계화한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총 6장 총36조(실제 총45조)인데 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은 총6장 6절 53조로 구성된 것처럼 절의 체계가 도입되고 규정의 양도 늘었다.

내용적 측면에서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기본계획과 추진체계 부분에서는, 5년 마다의 양성평등 실태조사, 양성평등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규정, 양성평등정책책임과 시·도까지 확대할 것이 규정되었다. 성평등정책 촉진 부분에서는 성 주류화 조치와 성인지 예산, 성 인지 교육 규정, 국가성평등지수 등이 새로이 규정되었다. 참여 부분에서는 관리직목표제 도입, 모·부성 권리 보장, 경력

단절 예방 및 지원이 명시되었고, 인권보호와 복지 부분에서는 성차별금지, 성희롱 정의의 소폭 확대,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이 명시되었다. 문화확산 부분에서는 여성친화도시, 평화·통일과정 여성참여, 성 인지적 국제개발협력 규정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양성평등기본법으로의 전환은 크게 몇 가지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입법의 기본이념과 방향이 명확하게 되었다.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은 남녀평등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주요 정책방향을 삼고 있다. 이는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성평등이 지금까지는 건강한 가정과 국가발전의 수단으로 전도되어 온 것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었는데, 금번의 입법으로 이것을 바로 잡은 셈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성차별적 관행의 해소,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대우, 모든 영역에서의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의 구현을 이 법의 정책 방향으로 명확히 하였다.

둘째, 여성발전기본법의 핵심 용어인 ‘여성발전’을 사용하지 않았다. 여성들의 능력개발, 역량강화, 인재육성의 필요성은 여성의 경제불평등 상태를 고려할 때 참여의 측면에서 여전히 주요 정책 중 하나이지만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발전/개발’이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위한 새 입법을 관통하는 핵심적 용어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여성들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을 능가하고 각종 능력 위주 채용에서 여성들이 발군의 실력을 보이다가 경력단절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9) 참고로 19대국회를 위하여 만들어진 입법자료집에서도 정부 정책의 성평등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해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할 필요성은 다시 제기되었다.〈18대국회 성평등 관련 입법현황 및 향후과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입법자료집, 2012. 796쪽

10)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 자료집, 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14. 2. 21.

점을 감안할 때, 핵심적인 문제는 ‘여성 개인의 발전/저발전 문제’ 라기보다는 이미 충분히 ‘발전된/개발된’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차별과 편견, 성불평등 구조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기본법으로서 제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점이다. 기본법은 “일반적으로 어떤 분야의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화를 도모하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입법 형식이다.¹¹⁾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당시 관련 개별법으로는¹²⁾ 남녀고용평등법(1987년 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년 제정),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1993년 제정), 영유아보육법(1991년 제정), 모자복지법(1989년 제정) 그리고 1990년 민법 상의 성불평등한 가족관계를 완화하는 개정이 있었다.¹³⁾ 그런데 이후 2014년에 이르기까지 성평등 관련 입법은 보다 다기하게 확대되어왔고, 이것이 일부 개정의 방식으로 기본법에 포섭되어 오기는 하였으나, 그 구체적 내용과 정책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¹⁴⁾ 전부 개정은 필연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성 주류화, 젠더 거버넌스 그리고 지역정책의 활성화를 지향하고자 했다. 성 주류화 규정을 신설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정책 규정을 체계화 했을 뿐 아니라 보건의료, 국제개발 협력 및 평화통일 과정에서 성 인지적 접근을

추구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젠더 통합의 확산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삼았다. 또한 거버넌스 정신을 살려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이행점검 부분을 담았다.¹⁵⁾ 또한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과 전문전담인력을 시·도까지 확대한 점, 지역성평등지수의 근거 규정을 둠으로서 지역의 성평등 정책 추진을 자극하고 여성친화도시의 지정과 지원을 통해 그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한 점 등이다.

나. 주요 내용

1) 정책 추진체계 강화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에서 5년마다의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여성발전기본법과의 차이점은 첫째, 심의·조정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성 주류화 관련 사항과 국가성평등지수 그리고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이 새로이 포함되었다. 둘째,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여성정책조정회의는 민간전문가가 5인 밖에 참여하지 않아(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하도록 하였으며, 이외에도 현행 공무원 중심의 실무위

11) 박영도(2006), <기본법의 입법모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p.16

12) 이하 법률관련 정리는, 차인순(2011), 「다양한 시각에서 본 여성통합 30년 3. 의회: 입법분야에서의 여성통합」, <사회발전을 향한 여성통합 30년의 성과와 전망(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6, pp.376-411에서 추출.

13) 친족의 범위를 부계와 모계 모두 8촌 이내 혈족으로 동등하게 하고, 친권을 부모 협의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14)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이후의 주요 개별법들은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규정, 정치자금법 관련규정, 공직선거법 관련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아이돌봄지원법,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교육기본법 및 교육공무원법 관련규정, 건강검진기본법 관련 규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관련규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관련규정, 통계법 관련 규정

15) CEDAW 협약의 이행 점검 부분은 국가가 매4년 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는 이행보고서에 대한 심의결과 권고되는 최종권해문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최종권해문이 만들어지기까지 유엔은 정부 측 의견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평가와 의견을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간접적 참여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원회와는 별개로 전문가 및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분과 위원회가 신설되어 현안을 논의하도록 하였다. 셋째, 전국적 추진체계의 강화이다. 양성평등책임관의 지정을 중앙행정기관만이 아니라 시·도 지사까지 확대하고 필요한 전담전문인력을 두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성평등정책의 추진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구조를 정비하였다.

2) 성 주류화 조치 체계화

성 주류화 조치 규정을 새로이 도입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관련 정책 규정을 체계화하였다. 관련 규정은 제15조 성별영향분석평가, 제16조 성인지 예산, 제17조 성인지 통계, 제18조 성인지 교육이다. 이는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여성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 천명된 성 주류화 조치가 그 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통계법 그리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업무 차원에서 공무원 성인지 교육으로 규정되던 것을 성 주류화 규정의 도입과 함께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성인지 교육 규정은 공무원 외에 일반인에게도 가능하도록 대상을 넓혔다. 그 밖에 국가와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국가성평등지수와 지역성평등지수에 대한 근거규정도 마련하였다.

3) 참여 확대

적극적 조치의 강화와 함께 정치, 경제 및 사회 영역에 성평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항들이 강화되었다. 적극적 조치 규정의 경우,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

적인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반면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 하고 있다. 적극적 조치의 본래의 취지가 단순한 성별 균형 맞추기가 아닌 누적된 불평등의 시정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차별로 인하여' 라는 점을 포함하게 되었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이 적극적 조치에 대한 이행의 권고와 결과의 점검 의무를 부여했다.

분야별 주요 참여 시책으로는, 첫째, 정책결정과 정·공직·정치 분야 참여에 있어서 2017년까지 정부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를 공표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에게 관리직 목표제 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공공기관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치참여와 관련해서는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에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의되어 있는데 반해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를 그 방향으로 명확히 하였다. 여기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란 남녀동수의 참여를 지향함을 의미한다.¹⁶⁾

둘째, 경제활동 관련분야 참여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고용 상 성평등 관련 규정 외에도 임신, 출산, 육아등을 이유로 한 경력단절이 없도록 예방할 것과

¹⁶⁾ 입법과정에서 '동등'과 '평등'은 국립국어원의 국어표준대사전의 용어정리를 따랐다. '평등'은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등'은 등급이나 정도가 같은 것을 의미한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모성보호 조항을 모성 권리의 보장으로 정책적 의미를 강화하고,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의 권리 보장을 포함하여 모·부성의 권리보장 조항으로 확대하였다. 현행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 조항을 일·가정 양립으로 조 제목을 바꾸고 보육,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의 조성 등 개별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였다.

셋째, 인적 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여성 인재 정보의 수집과 관리, 여성 관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4) 인권보호와 복지증진

먼저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크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에도 세계의 성평등법들은 성차별 금지와 성평등 촉진이 라는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의 기본법에서는 ‘성차별’ 과 관련된 기본적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다. 애초의 제정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에는 각종 법, 제도, 행정조치 및 관행 등에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규정이 있었으나 삭제되었다가 금번 개정으로 다시 기본법 내에 관련 규정이 복원되었다고 볼 수 있다.¹⁷⁾

또한 최근 일부 개정을 통해 정비되어 온 젠더 폭력 방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규정되었다. 성폭력, 가정 폭력, 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시책의 마련과 각 젠더폭력 분야에 대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비롯하여 성희롱 실태조사규정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건강권을 보강했다. 현행법에서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특성을 고려한 여성건강증진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추가하고, 모성 건강과 관련한 시책의 마련을 강조하였다.

5) 문화 확산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여성친화도시, 평화·통일 과정 여성참여, 성 인지적 국제개발협력 조항을 신설하였다. 여성친화도시의 의미를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평화·통일과정 여성참여 규정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와 더불어 국내·외 여성 평화 증진 및 통일을 위한 활동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 할 때에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것과 여성가족부 장관은 특히 양성 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현행 제28조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조항은 양성 평등기본법 제37조 양성평등 문화조성 규정에서 더욱 구체화되었는데,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 내용 뿐 아니라 성별을 이유로한 편견과 비하 또는 폭력적

17) 제11조(성차별개선위원회)는 1999년 2월 8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 제정법에 포함되면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삭제되었으며, 2005년에는 이 기능마저 축소 되어 국가인권위원회를 넘어가게 된다. 그 이후로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제28조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 개선 조항을 제외하고는 성차별과 관련된 시책 규정이 없었다. 이 신설규정을 계기로 성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관련하여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기타

최근까지 일부 개정된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한 규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는데, 관련기관으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인력 개발센터, 여성사박물관 등이 있다.

그 밖에 국회 보고 규정 또한 강화하여 현행 여성 발전기본법에서는 여성정책 연차보고서에 대하여만 정기국회 개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도 확정된 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규정하였다.

4. 나가며

양성평등기본법은 성평등을 위한 시책들을 확대, 강화하면서 성평등의 목표와 정책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합의한 정책과제의 목록을 나아갈 방향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여성정책의 진화과정에서 이미 중층적으로 내재하고 있었던 여러 성격의 정책들을 체계적 편제한 것이자 무게 중심을 변환시킨 것이다. 즉 그 간의 낡은 외투를 벗은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격한 정책적 변화를 야기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여성발전’이나 ‘여성정책’의 강조가 ‘여성 대상 정책’으로 협애화되면서 성평등의 가치와 방향이 흐려졌던 부분들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책임과 동등한 권리의 향유라는 이정표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에스핑 앤더슨의 용어를 빌자면, 우리 사회에서 성평등 평형(gender equality equilibrium)을 위한 변화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¹⁸⁾ 미시적 맥락에서 성평등에 대한 이해가 제각기 다른 현실을 고려하면 이 법 제정을 계기로 무엇이 성평등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평등인가에 대하여 사회 곳곳에서 작은 논의들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역설적인 바램이 있다. 그 간의 성평등이 “여성” 뒤에 가리워져 있었다면 이제 양성평등기본법을 시작으로 그 인식과 공감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더 드러나고 일상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18) 에스핑 앤더슨(2009), 〈끝나지 않은 혁명: 성역할의 혁명, 고령화에 대응하는 복지국가의 도전〉, 주은선, 김영미 역, 2014, 나눔의 집.

【참고】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발전기본법 체계 비교

양성평등기본법(2015. 7.1시행)		여성발전기본법(2014.7.1. 시행.)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1	목적	1	목적
2	기본이념	2	기본이념
3	정의: 양성평등, 성희롱, 사용자	3	정의: 여성정책, 성희롱, 사용자 등
4	국민의 권리와 의무	4	국민의 책무
5	국가 등의 책무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1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장 여성정책기본계획 등	
7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7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8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8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9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9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10	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13	여성관련 문제의 조사 등
제2절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11	양성평등위원회	11	여성정책조정회의
12	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11	여성정책조정회의
13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12	여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14	성 주류화 조치		-
15	성별영향분석평가	10조	정책의 분석·평가 등
		10조의2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등
16	성인지 예산		-
17	성인지 통계	13	여성관련 문제의 조사 등
18	성인지 교육	21조의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19	국가성평등지수 등		-
제2절 양성평등참여			
20	적극적 조치	6	적극적 조치
21	정책결정과정 참여	15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
22	공직 참여	16	공직참여
23	정치 참여	15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
24	경제활동 참여	17	고용평등
25	모·부성의 권리 보장	18	여성건강증진 및 모성보호강화
26	일·가정 양립지원	23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
27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21조의2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등
28	여성인재의 관리·육성	21조의3	여성인재의 관리·육성
	-	28조의2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양성평등기본법(2015. 7.1시행)		여성발전기본법(2014.7.1. 시행.)	
제3절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			
29	성차별의 금지		-
30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25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31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17조의2	성희롱의 방지 등
32	성희롱 실태조사	17조의3	성희롱 실태조사
33	복지증진	22	여성복지 증진
34	건강증진	18	여성건강증진 및 모성보호강화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35	양성평등한 가족	24	평등한 가족관계의 확립 등
		26	가사노동 가치의 평가
36	양성평등 교육	19	가정교육, 20.학교교육
		21	평생교육
37	양성평등 문화조성	28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38	양성평등 주간	14	여성주간
39	여성친화도시		-
40	국제협력	27	여성 국제협력
41	평화·통일 과정 참여		-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4장 여성발전기금	
42	기금의 설치 등	29	기금의 설치 등
43	기금의 용도	30	기금의 용도
44	기금의 회계기관	31	기금의 회계기관
제5장 양성평등정책 관련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제5장 여성사박물관 및 여성단체의 지원 등	
45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3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46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21조의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47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등	3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48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33조의2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49	청문	33조의3	청문
50	여성사박물관의 설립·운영	32조의2	여성사박물관의 설립·운영
51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지원	32	여성단체 등의 지원
제6장 보 칙		제6장 보 칙	
52	권한의 위임·위탁	35	권한의 위임·위탁
53	국회 보고	36	여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